국가전략연구위원회 이슈브리핑 18호 (발간일: 2023.12.13.)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 현황[1)]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1.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발달, 목표, 전략, 전술, 전개방식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보작전들과 영향력공작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의 영향력공작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서 전쟁 시뿐만 아니라 평화 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혼란 초래, 그리고 선거개입과 같은 매우 위협적인 전쟁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상 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 역시 매우 긴급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정보유포와 정보조작을 통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악의적 허위정보・조작행위들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2)]

북한 조선노동당의 한국에 대한 목표는 1950년대 등장한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목표에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큰 틀에

1) 이 글은 2023년 12월 7일 제6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Oxford University의 2019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70개국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허위정보조작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보고서로서는 드물게 북한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조작과 허위정보유포를 분석・보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상 영향력공작은 허위정보유포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오로지 북한의 정부만이 관여되어있는 활동이라는 점과, 한국의 선거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인간이 관여하는 댓글부대의 존재 등을 확인해주고 있다. Bradshaw, S., & Howard, P.N. 2019. 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Oxford University.

서 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공작은 기존의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위한 '전 조선혁명을 위한 3대 혁명역량(북한, 남한, 해외)'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3]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술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이유는 한국의 민주화와 정보화의 고도화 같은 사회·정치적 변화와 한국인들의 통일이나 혁명에 대한 인식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된 1990년 이후 한국 내 민중봉기나 혁명의 기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북한은 기존의 혁명적 전위정당인 지하당 외에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진보정당의 구축에 힘써왔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개입을 위한 여론조작은 합법적 정당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과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전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표현의 자유와 고도화된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내 반정부활동, 북한 선전·선동 등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북한에게 대남혁명전략 달성에 있어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서 인식되었고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은 이 전장의 핵심전력으로 인식되어왔다.[4] 즉, 북한에게 사이버 상 영향력 공작은 대남혁명전략을 위한 핵심 역량이자 사이버전의 일환인 사이버 심리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영향력공작은 북한의 군과 노동당이 직접 계획·지휘·관여한다.[5] 한국에 대한 사이버심리전과 영향력공작을 수행하는 북한의 핵심적 기구와 부서는 군 산하 정찰총국(산하의 작전국, 204소, 110 연구소), 통일전선부와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이 대표적이다. 정찰총국(조선인민군 586부대)은 형식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지만, 대남공작의 임무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는 독립기관이다.[6] 정찰총국은 김정은 세습체제를 대비해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진입'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정보기구들이 개편될 당시 국방위원회 직속기구로 신설되었다. 정찰총국은 기존의 산재해 있던 국내 및 대남·해외 기구들(당의 작전국과 35호실, 총참모부(군) 정찰국, 6.15국)를 통폐합하였다. 또한 당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자 영향력공작을 담당하는 핵심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의 '대남전략권'을 북한 군대인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로 이관하고 통일전선부의 기능은 대

3) 북한이 제시하는 3대 혁명역량강화노선들 중 한국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남한 내 민주주의 운동 지원; (2)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3)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4) 반혁명역량 약화 등이다: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의 대남전략.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23. (2023/12/6접속)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WqfKokIeDAxX91TQHHST-AZ4QFnoECBwQAQ&url=https%3A%2F%2Fwww.uniedu.go.kr%2Funiedu%2Fatchfile%2Fdown%2FF000001120.pdf&usg=AOvVaw3nqCcWnWlkE4o9qPy1Yjpu&opi=89978449

4) 2003년 이라크전을 두고 "미제는 이라크전쟁에서의 승리가 고도기술무기에 의한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심리전에 의한 악랄한 사상적 와해책동에 이라크가 녹아났다 "고 분석하였고 2004년에는 김정일이 "한국의 인터넷은 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으로 항일유격전 당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소중한 무기인 총과 같다"고 비유 하며, 사이버 공간을 한국 내 친북 의식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림.

5) Id. Bradshaw, S., & Howard, P.N. 2019.

6) 한상암. 이명우, 김윤영. 2023. 김정은 시대 북한정보기구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20:145-168. p. 155.

폭 축소하였다. 이어 2015년 정찰총국의 대남・해외 정보활동과 공작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정찰총국은 산하에 7개국을 두고 있으며 이 중 3국인 기술정찰국 산하에 사이버 심리전 등을 연구하는 110연구소를 두고 있다.[7] 이 중 정찰총국 산하 '204소'는 '사이버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한국의 허위정보유포, 정보조작 등을 통한 선거개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총국의 신설시기, 지시구조, 그리고 역할과 기능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군 주도의 사이버전의 일환인 사이버 심리전으로 인식하고 발전시켜왔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북한 주요 대남공작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는 대남심리전 사업과 통일전선 공작활동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허위정보유포, 친북 및 진보세력을 지원, 포섭, 확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의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고, 한국 내 지하당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하고 있다.[8] 그리고 대남심리전과 대남첩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 조평통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강당', '내나라' 등 180여개에 달하는 북한 웹사이트를 북한과 해외에 개설하여 대남사이버심리전과 영향력공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통일전선부 내에도 이른바 '댓글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댓글요원들은 대남혁명을 위한 선전선동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9] '댓글팀'의 존재에 대해서는 2019년 Oxford University의 허위조작정보관련 연구보고서에도 설명되고 있는데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팀의 총규모는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를 합쳐 약 200에서 300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0] 이들 '댓글팀'은 한국 검색엔진의 기사들에 댓글달기, 인터넷 커뮤니티(에를 들면 디시인사이드 등)와 인터넷 까페(진보, 친북까페들인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통일파랑새', '세계물흙길연맹' 등)등의 토론방, 게시판 등에 정권퇴진을 위한 반정부 여론 조장과 악의적 허위정보유포와 국론분열을 위한 선전선동 및 갈등유발을 위한 댓글활동과 북한 선전물과 허위정보를 유포하는('퍼나르기'방식) 활동을 수행한다.[11] 문화교류국 역시 핵심적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부서이다. 2009년 정보기구 개편당시 225국(구 대외연락부)였던 부서가 2012년 내각에서 통일전선부로 통합된 후 2015년 문화교류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문화교류국은 통일전선부 소속의 정보활동기구이자 대남공작기구로서 독자적 활동을 수행한다. 대남공작원 교육, 남파, 한국 내 각계각층 인물포섭을 통한 남한 지하당 구축, 김정은 일가 찬양 및 남한체제 전복 등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이버 전담기관을 통한 다양한 간첩 및 정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청주간첩단사건에서 북한간첩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간첩교신을 한 사례가 알려졌는데, 이는 문화교류국과 연계되어있다. [12]

---

7) Id. 한상암. 이명우, 김윤영. 2023.
8) 김윤영. 2014. 위장탈북자 간첩실태와 대책. 북한학보. 39(2). 북한연구소. p.11.
9) 방승배. 2013. 8. 12. 북.'종북 앱'유포... 댓글부대 '사이버알까기'작전. 문화일보.
10) Id. Bradshaw, S., & Howard, P.N. 2019.
11) Id. 김윤영. 2016. p. 256.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 공작의 시작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2003년 이후 미국의 이라크 전 사례 이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능력 우세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은 사이버 전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보다 최근 들어, 2014년 김정은의 '인터네트를 우리 사상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선전선동을 위한 기법이 YouTube, Twitter, Weibo, TikTok, Bilibili와 같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활용한 선전·선동을 이용한 보다 정교해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진일보하고 있다(예, 유투브의 관광홍보사이트 '조선의 오늘' 채널[13], 2019년 이 후, 유튜브의 인플루언서(송아, 유미), TikTok의 숏폼 인플루언서 활용(zoe discovers) 등).[14] 특히 최근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영향력공작의 전술을 학습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상청중 역시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청중들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대세습 선전, 북한 주체사상 같은 체제선전, 핵무력 등 군사강국의 선전과 같이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주장형식을 활용한 '조선중앙TV' 나 '우리민족끼리'의 전형적 선전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청중들에게 맞추어 소프트한 매력을 어필하려는 방식의 프로파간다를 선보이며 새롭게 진화된 영향력 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선전물들은 여러 외국어로(영어, 러시아어(자막), 중국어(자막), 한국어)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소개하는 방식의 내러티브 전개를 채택하여 북한이 개방적이고 정상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와 삼대세습을 비난하는 시각, 특히 서구국가들과 서구언론들(특히 미국과 한국 등)의 주장과 보도가 왜곡된 허위정보라고 주장하려는 목적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해외로부터의 평양여행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광산업 홍보의 실제적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의 제작이나 해외송출 자체가 북한 당국의 모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YouTube 인플루언서들의 동영상이나 TikTok의 숏폼들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자 영향력공작의 일환이라고 분석되고 있다.[15]

앞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남한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통한 통일전선의 구체적인 전략 목표는 약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 내 진보, 민주 세력을 포섭하여 친북세력을 확장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을 구축(정치인, 정당, 진보민주

12) Id. 한상암. 이명우, 김윤영. 2023. p.156.
13) 박한우. 2018. '북한 유튜브 채널분석: '조선의 오늘'에 대한 이용자 반응과 텍스트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권 5호. p.2581.
14) 윤민우. 2023.
15) Han Do Hyun, Lee Jeong Eun, & Cho Jinwoo. 2023. 7.3. Soft propaganda? YouTube deletes channels promoting North Korean lifestyle. Radio Free Asia.; David.D. Lee. 23, July. 2022. Are YouTuber's videos of North Korean parties 'daily life' or 'propaganda'? South China Morning Post.; Reddy, S. March, 8. 2023. New TikTok channels highlights rise of North Korea contents on the short-video app. NKNews.

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과 노조 등)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내 남남갈등 유발, 국론분열, 그리고 사회혼란 유도이다. 셋째, 반정부・반미・반일・반자본주의 의식 고취, 한미동맹 해체 여론을 조성, 북한에게 적대적인 정권 퇴진, 및 남한 내 반혁명 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결과적으로 남조선혁명을 달성을 위해 북한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대남심리전 차원으로 허위정보유포, 음모론확산을 통해 북한에게 유리한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공작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말 북한이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격적 사이버 심리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외국가에 약 180개에 달하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론조작, 사회혼란, 선거개입 등의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3년 '우리민족끼리' 개설을 시작으로 '구국전선', '조선신보', '여명', '내나라' 등의 사이트를 중국(특히 중국의 영향력공작의 본거지로 알려진 '장수'지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해외 무역회사로 위장한 사이버 공작거점(이들 지역들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지역으로 북한 간첩활동 거점들이다)에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16] 이들 해외파견요원들은 북한의 정보요원들로 대남선전선동, 사이버전, 해킹, 간첩지령 및 포섭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의 선거 등의 주요 시기에는 댓글요원으로도 활동한다.

북한의 영향력공작의 전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기구들인 통일전선부에서 영향력공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북한이 직접・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확산된다. 이어 국내 친북(또는 종북)성향의 사이트로 확산, 유포되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통적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정보나 음모론의 가짜뉴스 등이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친북성향의 사이트는 앞서 열거된 북한의 선전선동사이트들이 현재 정부의 차단조치로 국내에서 직접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IP를 제 3국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내 온라인에 북한의 선전선동 자료들의 '퍼나르기'식의 확산과 유포를 수행한다.[17] 이 같은 북한 영향력공작은 '1:9:90'의 법칙 아래 전개된다. 이는 1명의 조직원이 북한 선전물과 허위정보를 사이트에 게제하면 국내외의 연계된 9명이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고 다시 90명에게 확산시키는 것이다.[18] 친북성향의 세력들 외에 북한의 댓글부대들은 국내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활동한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 등의 공격으로 획득한 수백만 명의 한국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를 활용하여 Facebook, Twitter, YouTube 등 소셜미디어에 다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국내 사이트에서 직접 북한선전선동의 글을 게재・유포하고 확산한다.

16) 박수유. 2023. 남한의 민주화와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변화. 신아세아. 30(3): 90-119. p.109.
17) 연합뉴스. 2013. 3. 20. 북 통전부. 225국,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총력. NewDaily.
18) Id. 박수유. 2023.p.110; 유성옥. 2020.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전략연구. 27(3):p.37.

2. 북한의 영향력공작의 사례들

북한의 사이버 상 영향력공작의 가장 핵심적인 활용은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사회혼란의 유도와 선거개입에서 드러난다. 북한이 주도한 영향력공작은 실제 한국사회에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왔다. 이 중 대표적인 대남심리전이자 허위사실유포의 사례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다. 2010년 3월 26일 피격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민관합작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북한에 의한 어뢰포격 격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매체들(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남한의 천안함 북한 연루설 조작"을 주장하였는데, 이 후 한국 내 친북 및 진보성향의 단체들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선전물과 동일한 선전물이 바로 게시되었고 한국 내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에서 천안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 음모론, 불신, 혼란 등의 남남갈등이 더 심각해 졌다.[19] 또한 북한은 천안함 사건 직후 실시된 한국의 지자체 선거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당시 선거구도를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나누는 선동구호를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켰는데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평화세력대 반평화세력의 구분을 통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 대한 갈등유발, 진보진영지지 등의 영향력공작의 일환이다.[20] 또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기존 북한의 도발이 보수층을 결집시킨다는 공식도 깨뜨렸다. 당시 '안보무능'이라는 프레임과 논란이 더해져 집권당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보수층의 분열이 초래되었다.[21] 이러한 북한의 천안함 음모론확산에 있어서 북한 정찰총국 204소의 댓글부대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북한의 의도적인 영향력공작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역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개입한 허위정보를 활용한 영향력공작의 사례이다. 통일전선부는 북한 해외 주재 공작원들에게 한국의 국정원에 의한 '기획 납치극'이라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북한 공작원들이 이런 취지의 게시물과 글을 국내 사이트에 게제, 유포,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22] 보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친북 및 진보세력들에게 '보수 유투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 또는 '일보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유표해 반일감정을 고조하라' 등의 지시를 내려 사이버 공간에서 반혁명세력인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에 대한 신뢰하락과 내부적 갈등을 유도하는 영향력공작의 전술을 사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23]

---

19) 당시 참여연대는 '천안함 이슈리포트 1, 2"를 발간하고 천안함 조사결과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 8가지와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들을 들어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일으켰고 현재가지도 일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용섭. 2011. 천안함 사건 이후 나타난 남남갈등에 대한 연구.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113-138.

20) Id. 박수유. 2023. p.111.

21) 장한재. 2021.북한의 대남 '선거개입'전술. INKS 논평. 북한연구소.

22) 강윤혁기자. 2016.10.24. 북한 댓글 부대 국내 포털 활동. 서울신문.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 공작의 주요 대상은 한국의 선거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의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한국의 선거기간에 특정하여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일정하게 관찰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로도 확인되고 있다.[24] 또한 북한이 한국의 선거기간에 집중적으로 선전선동과 허위정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점이 발견된다.[25] 선거개입 목적의 사이버 상 영향력공작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사이버 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과 같은 전개방식을 가진다. 먼저 북한의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정찰총국 등에서 보수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허위정보유포나 선전선동 및 비방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국영매체의 온라인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하면 한국 내 친북성향 단체와 개인들 그리고 조직들이 이들 내용을 인터넷에 확산, 유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확산되고 논란이 된 내용들이 다시 국내의 주요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다.[26] 이 과정에서 국내 친북성향의 웹사이트나 YouTube의 인플루언서 등의 중간자들을 통한 내러티브의 확산은 한국 내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영향력공작은 오프라인에서 전술과 함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선거기간 동안 '평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과의 '협력', '개방' 등 유화적인 정책을 당론으로 펼치는 정치인과 정당들에 대해 우호적인 내러티브와 분위기가 한국 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군사적 무력도발을 시도한다. 북한이 전쟁의 위협과 공포를 오프라인에서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조성하는 위협 전술을 사용하여 '평화', '민족애'를 주장하는 한국 내 진보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는 전술이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마화' 전술을 사용하여 북한정권에 불리한 보수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전쟁광', '친일파', '적폐' 등의 네거티브 내러티브를 생산・유포하여 이들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를 실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댓글 비방에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보수유권자들 사이에 유망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후보사퇴 역시 북한이 배후가 된 선거개입 사례로 보는 주장들이 있다. 반전 총장이 무소속으로 대권출마의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노동신문 등의 비방이 있었고, 이어 친북웹사이트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당시 일본 왕세자 나루히토에게 절을 하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확산시켜 반 전총장에게 친일파의 프레임을 씌우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의 친일파 프레임은 결국 그의 출마철회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7]

---

23) Id. 박수유. 2023.p.110; 신동훈, 2023. 3.20. 북한발 가짜뉴스 없다고 할 수 있나. 조선일보.
24) CSIS. April 10, 2017. ROK Elections and DPRK Provocations. A produce of the CSIS Korea chair: Beyond Parallel: Bringing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to Korean Unification. https://beyondparallel.csis.org/database-rok-elections-and-dprk-provocations/
25) Id. Bradshaw, S., & Howard, P.N. 2019.
26) 장한재. 2021.북한의 대남 '선거개입'전술. INKS 논평. 북한연구소.
27) Seong Hyeon Choi. March 7, 2022. North Korea's Provocative and Secret Interventions in South

2022년 보수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와 같은 유사한 패턴의 허위정보의 확산과 북한의 전형적인 희화화 전술이 시도되었다.[28] 예를 들면, 노동신문 웹사이트 등에서 윤석열후보를 한반도 평화를 탈선시키려는 '전쟁광'으로 묘사하면서 비방과 희화화하는 '밈'들을 게시하고 국내의 친북, 진보성향 단체들의 웹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에 대한 허위정보유포와 가짜뉴스 그리고 희화화·악마화하는 내러티브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와 이미지와 담론들은 한국의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언론매체에도 보도되었다.[29] 이러한 북한의 선거개입은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찰총국 고위 간부인 대좌 출신한 탈북자는 북한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침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캠페인을 통해 은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30]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지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사례들은 북한만의 전략·전술적 기법은 아니다.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합병과정, 그리고 중국의 2018년 2020년 대만에 대한 선거개입에서 '민족과 역사적 사실', 적대적 정치세력에 대한 '악마화' 내러티브 및 여러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사이버 심리전, 정보조작이 있었다. 이에 더해 실제적인 군사적인 무력사용의 위협이 또 다른 영향력공작 내러티브로서 함께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격대상이 되었던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 친중국세력 등은 이러한 내러티브와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선거개입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3. 북한 사이버 상 영향력공작의 특징과 진화

북한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 영향력공작 기법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이다.[31] 이 허위정보를 통한 영향력공작은 한국 사회 내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분열(divide),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플레임(Flame), 그리고 이를 활용한 희화화(mockery) 및 비인격화dehumanization) 전술 등을 사용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오프라인에서의 군사무력충돌이나 시위 그리고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을 통

Korean Elections. CSIS. https://www.csis.org/blogs/new-perspectives-asia/north-koreas-provocative-and-secret-interventions-south-korean

28) Id. 장한재. 2021.

29) 윤석열-이재명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쏘시개가 됐다. 이 인터뷰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사건: 출처 : 김현지·조새수. 2023. 9/ 15. 가짜뉴스에 칼빼든 윤석열정부. '디지털 언론중재위'만든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

30) Id. Seong Hyeon Choi. March 7, 2022.

31) Id. Bradshaw, S., & Howard, P.N. 2019.

한 전쟁에 대한 선언적 위협 등과 함께 한국인에게 겁(scare)을 주어 북한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 가려는 전술적 기법도 사용된다. 허위정보는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중요한 전술로 활용된다. 그러나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러시아나,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공작을 상시적으로 이어가는 중국과 비교할 때 규모나 능력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정교함과 세련됨이 부족하고 규모도 제한적이다. 북한의 경우, 사이버 영향력공작은 주로 한국을 대상으로 특히 선거기간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영향력공작이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근거들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의 사례에서 발견된 기계화된 가짜계정을 사용하거나 '봇(bot)'과 같은 로봇을 이용한 댓글의 정보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허위정보유포와 확산에 오로지 인간이 직접 개설하고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의 댓글부대들의 규모는 약 200-300명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댓글총량과 허위정보유포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제한적일 것이다. 일견 이는 오히려 북한의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북한 영향력공작의 능력의 약점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허위정보유포가 국내 기반의 친북, 종북 등 추종세력과 지하당과 간첩 등의 구축세력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북한의 댓글부대의 수가 적더라도 허위정보는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인간에 의한 댓글은 기계적으로 만든 가짜 계정의 활동이나 봇(bot)에 의한 댓글들과 달리 언어와 뉘앙스의 오류, 철자와 문법의 오류 그리고 기계화된 댓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쉽게 감지되지 않아 국내 한국인과 북한요원의 댓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 댓글요원들 역시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하며 통일전선부는 북한의 댓글요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국식으로 바꾸어 주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댓글공작은 중국의 수백,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마우당이나 'Spamouflage 공작'과 같이 기계화된 계정을 이용하여 시도되는 댓글조작보다도 이를 감지하고 파악하여 밝혀내는 것이 더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이 진보되고 있다는 증후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2019년 이 후 YouTube를 활용한 'New DPRK'의 '은아', '유미'와 '송아' 등의 Vlog와 같이 YouTube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자연스러운 동영상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이 활용하는 기법을 학습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YouTube에 그치지 않고 Weibo, TikTok 등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북한의 TikTok 활용이 더욱 자주 발견되고 있는 데 YouTube에서 몇 년 전부터 New DPRK의 '은아' 등의 계정을 삭제하고 이어 등장한 '유미'와 '송아'의 YouTube도 2023년 6월 이래로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의 영향력공작을 위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미국에 근거한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보다 글로벌 소셜플랫폼이지만 중국회사인 TikTok 등을 선호하여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TikTok의 숏폼에는 북한의 사이버 상 영향력 공작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계정들에서 자연스

럽게 외국인 관광객이 찍어서 업로드 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북한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담긴 숏폼 영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상 역시 북한이 해외여행객들의 북한 내 촬영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들을 해외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해 업로드 한 것이라기보다 북한당국의 지원과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TikTok 계정들 중 "Zoe discovers" 계정 운영자인 백인 20대 초반의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은 최근 북한여행을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다수 업로드 하였는데, 이러한 영상들은 미국과 한국 등 서구언론에서 묘사하는 북한과 반대되는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이들 영상에서 북한의 현재모습을 1960-7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북한은 정상국가이며 매우 안전하고 행복하며 생각보다 발전했으며 신비로운 국가라는 내러티브가 표출된다. 이러한 TikTok의 숏폼의 활용은 YouTube의 Vlog 영상들의 활용보다 더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상들을 대량 게재하는 "Zoe discovers" 계정은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허위정보유포가 중간자(middle man)를 고용하는 기법의 활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의 사이버 상 영향력 공작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 영향력공작은 상당히 오랜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영향력공작은 한국의 선거, 국내 여론형성 그리고 친북세력을 지원하고 이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북한의 대남혁명역량을 강화시키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영향력을 미쳐 온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사나 정보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례들이 드물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은 관련연구와 정책적 대응에 큰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해외 특히 북한에 의한 허위정보나 정보조작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러한 대응은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러시아나 중국 등에 의해 선거개입의 경험이 있는 미국이나 대만의 경우 국가에서 사법적 대응을 통한 검찰수사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국가정보기관이나 국무부 등에서 선거에 대한 해외의 악의적 영향력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러시아의 2016년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FBI가 수사를 하고 이에 관련된 러시아 GRU 인물 12명에 대해 기소하고 "FBI Wanted List"에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정보공동체역시 대선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미국 국가정보장사무실(ODNI)의 2017년 1월 안보위협분석보고서에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군정보기관인 GRU, 국내정보기관인 FSB, 그리고 해외정보국인 SVR가 모두 가담하여 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018년 중국 인민군 등에 의해 선거개입을 경험한 대만 역시, 대만 법무부가 2018년 대만지방선거기간동안 중국정부와 연계가 의심스러운 소셜미디어, 컨텐츠 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중국의 재정지원을 받은 후보들도 수사하였다. 그리고 대만 법무부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만선거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이버 상 허위정보와 정보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의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를 대만국민들에게 공개하기

도 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해외의 선거개입의 위협에 대해 인식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영향력공작은 피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남거나 피해상황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작전의 하나인 영향력공작의 효과나 여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합의, 국민적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실제 수행한 사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전략적인 내러티브로 전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공작이 선거기간에 집중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선거기간 내 선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기관들, 외교부, 미군, 정보당국 등에 따른 차별적 '포컬컨선(focal concerns)' 관점에 따라 해외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미국 국토안보부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사이버안보와 인프라스트럭처 보안기관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이하 CISA)의 대응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국은 해외의 영향력공작 또는 정보작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핵심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개입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내 인프라스트럭쳐의 보호와 침해시 대응을 담당하는 CISA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의 북한의 선거개입을 대비하기 위한 접근에 있어서 좋은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선거 시 북한개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여러 법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데 이는 여론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특히 '언론침해'와 같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국민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틀 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한다. 이미 우리 국민의 인식 내에 존재하는 '틀'을 제시하여 그 안에서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위협의 파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의 실제 침해사례를 알려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어떤 침해인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구성개념을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